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 뒷받침한다

- 산업부장관·국방부장관 공동주재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열려
-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
올해만 4,000억원 규모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국방부(장관 신원식, 이하 국방부)는 4월 17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1회)」를 공동 주재하였다.

특히,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협의회 참석범위가 확대(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24.4.2.)되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②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③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금년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첨단

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적극 반영하여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한다.

둘째,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하여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 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항공엔진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연구개발(R&D)도 본격 추진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연구개발(R&D) 협의체를 가동하여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이전도 지원한다.

셋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들과 공동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또한,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 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2년간 K 방산 외연확장,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화 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 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을 제안하였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국방우주 궤도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우주기업의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하여 국내기업이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면서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책임자	과 장	임채욱	(044-203-4150)
		담당자	사무관	민승기	(044-203-4151)
		담당자	사무관	이순호	(044-203-4152)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	책임자	과장	천영훈	(02-748-5420)
		담당자	사무관	이현주	(02-748-5414)

붙임 1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요 및 세부계획(안)

1 개요

○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협의 추진*

* (근거법령)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 일시/장소 : '24.4.17.(수) 14:00~15:20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참석대상 : 공동위원장(2인), 부위원장(1인), 위원(12인)* 등 약 40여명

－ (공동위원장) 산업부장관, 국방부장관

－ (부위원장) 방사청장

－ (위원) 산업부, 국방부,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중기부, 각 군, 수출입은행, 방위산업진흥회

* 범정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중기부, 각 군, 수출입은행, 방위산업진흥회 등 상시 위원 확대(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24.4.2.)

2 세부계획(안)

구분	안건 요지	비고
14:00~14:05(05')	■ 개최 및 주요 참석자 소개	-
14:05~14:15(10')	■ 모두발언 (산업부 → 국방부順)	-
14:15~14:25(10')	■ (안건1) 2023 방산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과제 이행방안	안건별 소관부처 국장 발표
	■ (안건2)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14:25~14:35(10')	■ 토의 (안건1 ~ 안건2)	-
14:35~14:50(15')	■ (안건3)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안건별 소관부처 국장 발표
	■ (안건4)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 (안건5) 대드론체계 구축 운영 고도화 협의 추진	
14:50~15:05(15')	■ 토의 (안건3 ~ 안건5)	-
15:05~15:15(10')	■ 마무리발언(국방부 → 산업부順)	-
15:15~15:20(05')	■ 폐회 및 기념촬영	-

글로벌 방위산업 4大 강국 도약

< 기본 방향 >

◇ 방위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 ◇

- ① 첨단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첨단 제조 역량 확충
- ② 민·군간 산업 시너지 창출을 위한 선순환 구조 강화
- ③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입체적 지원시스템 가동

주요 정책과제

첨단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 첨단방산 소재부품 기술 투자 확대
- 방위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 민·군 다목적 첨단기술 협력 사업 강화
- 민·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 전략 국가별 방산·산업 패키지 전략추진
- 다각적인 국제 방산 협력 확장
- 수출 지원 네트워크 강화

1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 5대 첨단방산 소재부품 기술에 금년에만 4,000억원 규모 투자
- 방산 분야 최초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 조성 등 기술투자 강화
- 방산 핵심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에 반영하여 R&D 등 지원 확대
- 방산 기반산업에서 연 2,000명 이상 인력양성 및 S/W 교육 강화
- 방산기업 얼라이언스 가동,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 도입 추진

2 민·군 협력 및 산업 융복합 촉진

- 민군기술협력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민군기술협력 촉진
- 첨단항공엔진 등 도전적 R&D 추진 및 기술교류회, 민·군 비즈니스포럼 활성화
- 민군R&D협의체 가동,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3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 전략 국가별 방산·산업 패키지 수출전략 마련 및 절충교역 활성화
- 국제 공동 R&D 및 글로벌 기업 첨단 R&D센터 유치 등 국제협력 확장
- 방산분야 무역보험 공급 확대, 국제인증·표준 지원 등 수출지원 네트워크 강화